

조명받지 못한 광주·전남 독립운동가

광주학생운동 등 독립운동 모태 불구 유공자 미미
광주 191명·전남 174명으로 전국 비중 최하위권
자료 미흡 이유 속 사상적 혼란기 따른 서훈 배제

광주·전남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학생독립운동·농민운동 등 일제 강점기를 통틀어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만한 굵직한 활동을 하고도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독립 유공자 수는 순국선열(항일운동을 하다 순국한 인사) 781명·애국지사(항일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 인사) 6736명 등 모두 7517명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1970명(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807명(24%), ▲경북 479명(6.37%) ▲부산 461명(6.13%) ▲대구 389명(5.17%) ▲인천·충남 324명씩(4.31%) ▲경남 307명(4.08%) ▲전북 244명(3.24%) ▲광주 191명(2.54%) ▲대전 187명(2.48%) ▲전남 174명(2.31%) 등의 순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평균 독립유공자 수가 432명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와 전남의 숫자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지역 독립운동 연구자들 사이에에선 지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농민운동, 항일 운동 과정에서 수백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타 지역보다 독립활동을 한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광주·전남지역 독립유공자가 적은 것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 기관이 유족이나 후손들에게만 서훈 절차를 맡겨둔 탓도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사상적 혼란기였던 점으로 미뤄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중에는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타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들이 서훈에서 배제된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출신인 장재성(1908~1950년)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광주학생운동을 이끈 장본인이다. 그는 성진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을 위한 모임에 참여한 혐의로 이듬해 광주형무

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6·25 전쟁 당시 경찰에 의해 처형됐다.

그의 독립운동활동 기록만 놓고 봤을 땐 서훈 자격이 충분한데도, 그의 후손은 아직까지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1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분신한 최현열(당시 81세)씨의 아버지 최병수(1906년 출생) 선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암군 덕진면 출신인 그는 지난 1932년 ‘영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에 몸담았다. 당시 그는 영암 지역 20대 초중반 청년들과 함께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소작인 청년회’를 결성해 활동했다.

일제 형사사건부를 살펴보면 최씨는 일제에 1933년 1월 말 치안유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수감된 후 1934년 9월까지 투옥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들 최현열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신청했지만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홍길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가보훈처 유공자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며 “독립운동과 관련한 업적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태극기 무료로 나눠줍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광주북구협의회 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동림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절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남 향토사학자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 광주·전남 12명 국가유공자 인정 받아

경남지역 향토사학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광주·전남지역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 하동에 있는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 그는 1993년부터 영·호남지역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신청을 통해 지금까지 130여명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데 기여했다. 2014년에는 영·호남출신 항일투사 28명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도록 뒷받

쳤다.

그는 최근 광주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항일운동가 12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도왔다. 2009년 대전 국가기록원에서 광주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항일운동가 48명의 판결문을 찾아 내 관련 자료가 있는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청원했다.

이들은 광주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광주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현



정재상 소장

재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튼법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징역 4개월까지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 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3명, 순천 3명, 나주·장흥·강진·고흥·경남 하동·평안남도 성천군 각 1명이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항일운동가는 이달근(당시 27세·평안남도 성천군), 김정수(당시 21세·장흥군) 2명이다.

건국포장은 정몽석(당시 18세·전남 광주군), 이남채(당시 21세·전남 광주군) 2명이 받았다.

광주 3·1 만세운동은 장남인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께 광주 부동교(광주시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을 잇는 다리) 아래 작은 장터에서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농업학교 교사들 주도로 학생 주민 1500여명이 펼친 독립만세운동이다.

정 소장은 “광주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정부포상을 받은 항일운동가 12명 외 36명은 포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사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5대 째 가보 분청사기 등 2000만원 흠쳐 kg당 1만원에 고물상 넘긴 70대 절도범

도난품 중 분청사기만 회수 못해

화가 집안의 가보인 수백만 원 상당의 분청사기 등을 훔친 뒤 이를 혈값에 되판 7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74)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 있는 화가 이모(58)씨의 화실에 몰래 들어갔다.

화실엔 이씨 집안에서 5대째 내려온 분청사기(시가 700만원 상당)와 유가구첩반상기·일본도자기 등이 진열돼 있었다.

김씨는 골동품 20여 점을 쓸어담은 뒤 고물상에 1kg당 1만원씩 받고 넘겼다.

훔친 물품의 시가가 2000만원에 달

하는데도, 김씨는 불품없는 단순 절재 그릇인 것으로 판단, 시가의 10분의1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긴 것이다.

김씨는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인상착의가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집 방충망에 구멍이 나 이를 교체하려고 인적이 없는 재개발 구역에 갔다가 문이 잠긴 화실을 보고 침입했다”며 “비싼 물품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4일 김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훔친 물건 20점 가운데 19점은 회수했지만 ‘가보’인 분청사기가 빠져있자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유병언 신고자 보상금 1억 못받는 이유

‘신원 알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소송서 패소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

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건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불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불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골동품 수집 취미 40대 고물상서 헌책 흠쳤다 ‘들통’



○…평소 골동품 수집을 취미삼아 하던 40대 남성이 고물상에 시집 등 헌책을 훔치다 경찰서행.

○~1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채모(49)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박모(64)씨의 고물상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집을 몰래 가져가는 등 헌책 두 권을 훔

친 혐의.

○~채씨는 고물상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고물상에 헌책을 사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시집이 보였고 (주인이) 이를 가져가도 모를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